

##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의 의의와 경제정책 방향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044-414-1093)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044-414-1067)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 차 례

1. 2019 인도 총선 결과 및 의의
2.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3. 한·인도 협력 시사점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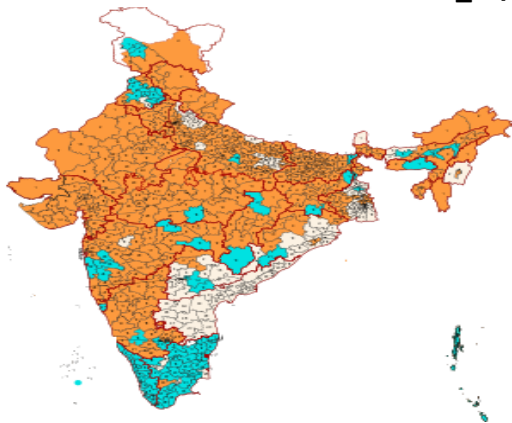
- ▶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 인도의 17대 하원(Lok Sabha) 총선에서 BJP(인도국민당)가 압승을 거두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확정됨.
  - 모디 정권은 급격한 화폐와 조세 개혁정책, 지속된 실업난, 주요 작물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집권 후반 지지도가 하락하였으나, 총선 결과 BJP는 총 의석 542석 중 과반(272석)이 넘는 303석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총선에 이어 단독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1980년 창당 이후 역대 총선 중 최대 득표를 기록함.
  - 특히 이번 총선에서 BJP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등 힌두벨트 지역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트리나몰 콩글레스(AITC)가 강세인 '웨스트 벵갈(West Bengal)'에서 총 18석(2014, 2석)을 확보하는 등 좌파 성향, 카스트, 종교 성향을 극복하는 투표 결과를 보임.
- ▶ 이번 인도 총선에서 BJP의 압승은 '인도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모디 총리의 정책적 리더십에 대한 인도 국민의 선택을 의미하여, 종교·카스트 등 과거 정치적 이념이 중시되었던 인도 사회의 변화로 해석됨.
  - 모디 총리의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4차 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 공약은 경제 이슈에 민감한 청년들의 표심을 이끌었고, 도농지역 인프라 개선 노력이 인도 국민의 표를 이끌어냄.
- ▶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모디노믹스 1기 정책의 지속 및 구체화된 산업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됨.
  - [거시정책] GST 개혁(통합된 단일 세율 변경 및 제외품목 포함 과세)을 통한 세수 확대와 재정적자 목표치(GDP 대비 3%) 달성을 위한 재정적자 감소 노력이 예상됨.
  - [산업정책] 제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디지털 생체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산업 정책,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정책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및 토지 개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무역정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모디 정부의 재집권은 신남방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며, 모디 총리 2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응되는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됨.
  - 향후 인도의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 그룹',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민관 협의 채널을 조속히 설치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인도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인도의 높아진 수입대체정책에 대비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상설,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개정을 통한 양허율 제고 등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인도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진출 준비 기업을 위한 전문 투자자문 서비스 등의 구체적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

# 1. 2019 인도 총선 결과 및 의의

## 가. 선거 경과 및 결과

- [총선 결과] 17대 하원(Lok Sabha)을 구성하는 2019 인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압승함에 따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확정됨.
- BJP는 총 의석 542석<sup>1)</sup> 중 절반(272석)이 넘는 303석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282석) 총선에 이어 단독 과반을 차지했으며, BJP 주축의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은 2014년 총선보다 17석 많은 353석을 확보함.
- BJP는 1980년 창당 이후 참여한 역대 총선 중 최다 득표를 기록했으며,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Atal Bihari Vajpayee, 11<sup>2)</sup>·12·13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16·17대) 총 2명의 총리를 배출함.

그림 1. 인도의 2019년 총선 결과



- [17대 하원 선거 개요]
- 선거 기간: 4월 11일~5월 19일(약 6주)
  - 유권자 수: 약 8억 7,500만 명
  - 총 투표율: 65.78%
  - 결과 요약:

구분	2019	2014	증감율
NDA(BJP+)	353(303)	336(282)	▲5.1%
UPA(INC+)	91(52)	60(44)	▲51.7%
기타	98	147	▼33.6%

주: 지도에서 주황색은 BJP(NDA), 푸른색은 INC(UPA), 회색은 기타 정당 승리 지역을 의미.<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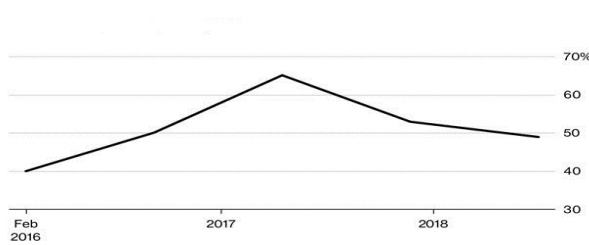
자료: Wikipedia 및 Election Commission of India(2019 Resul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5. 27).

- [선거 주요 이슈 및 경과] 201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농민 임금 2배 상승’,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sup>4)</sup> 급격한 화폐개혁(Demonetization) 및 조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개혁 시행,<sup>5)</sup> 지속된 실업난과 주요 작물가격 폭락 등으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도가 하락했음.

1) 인도 총선은 5년마다 실시되며, 직접투표를 통해 총 543석의 하원을 선출하나 지난 4월 인도 남부 타밀나두 벨로레(Vellore) 지역 선거가 불법자금 관련으로 취소됨에 따라 542석으로 변경됨.  
 2) 11대 재임 기간은 BJP의 과반 확보 실패로 16일에 그침.  
 3) 인도 정당은 크게 ① BJP(NDA) ②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③ 기타 야당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도 총선제도 및 이슈 관련 세부 내용은 김도연, 윤지현(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4) 2013년 인도경제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 높은 물가상승률(7%) 등 경기 불안을 겪었고, 2G 관련 부패 스캔들로 INC의 지지도가 급감, 국민들은 구라자르 주총리 출신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모디를 전폭 지지하였음.

- 2017년 70%에 육박했던 지지도는 지속 하락해 2018년 말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등 주요 지지기반 지역(힌두벨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패하면서 현지 여론은 BJP 단독 과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정권 교체설도 언급되었음.
- 모디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상층 카스트의 경제 약자를 위한 할당제,<sup>6)</sup> 농민 임금 지원제도(PM-KISAN Scheme),<sup>7)</sup> 소득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 등 각종 시혜적인 정책을 대거 시행했으며, 2019년 2월 발생한 카슈미르 풀와마(Pulwama) 폭탄 테러 사태에 파키스탄 발라코트(Balakot) 지역을 보복 공습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도를 반등시킴.
- 아울러 인도 국민 약 80%가 믿는 힌두교의 힌두성(힌두뜨바)<sup>8)</sup>을 강조함으로써 재집권의 굳건한 발판을 다짐.

그림 2. 모디 총리 지지도(2016~18년)



자료: The Economic Times(검색일: 2019. 5. 27).

표 1.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관	조사 결과		
		NDA	UPA	기타
2019. 5. 19*	TimesNow	306	132	104
2019. 4. 9	TimesNow-VMR	279	149	115
2019. 3	IndiaTV-CNX	285	126	132
2019. 1	VDPAssociates	225	167	150
2018. 12	ABPNews-CVoter	247	171	125
2018. 1	IndiaToday	309	102	132

주: \* 출구조사 결과.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선거 결과 평가 및 의의

■ [평가 결과] 2019 인도 총선 결과는 ① BJP의 전국적인 영향력 확대 ② INC의 패배 및 간디家の 정치 생명력 약화 ③ 좌파 성향, 카스트 및 종교 기반 정당 약화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장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난 지역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의 트리나몰콩글레스(AITC: All India Trinamool Congress)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웨스트 벵갈(West Bengal)’로, 2014년 총선에서 BJP는 단 2석을 차지했으나, 2019년 총선에서는 총 18석을 확보함.<sup>9)</sup>
- 그 외 북동부 지역 트리푸라(Tripura, 2석),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2석), 아쌈(Assam, 9석), 마니푸르(Manipur, 1석)에서 2014년(6석)과 비교해 약 2배 이상인 총 14석을 확보함.
- 모디 정부는 북동부 지역을 ‘인도 성장의 엔진’이라 언급하며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sup>10)</sup>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BJP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6) 공공기관 채용 및 고등교육 입학 정원의 10%를 해당 카스트(연 소득 80만 루피 이하 등)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함.

7) 모디 정부는 해당 정책을 2019/20년 잠정예산안 발표(2019. 2. 1) 직후인 2월 24일에 우타르 프라데시 포함 14개 주를 대상으로 시행. 지난 4월에 2회 차 지급을 완료함.

8) 힌두뜨바(Hindutva)는 ‘힌두원리’, ‘힌두임(Hinduness)’라는 뜻으로 힌두 원리주의, 힌두 지상주의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최중찬 외(2010), p. 80. 2011 인도 인구 총조사(Census)에 따르면,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 79.8%, 무슬림 14.23%, 기타 5.97%로 구성됨.

9)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 △반무슬림 정서 △청년 유권자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The Wire(2019. 5. 27), “Three factors that led to the BJP’s impressive gains in West Bengal”(검색일: 2019. 5. 30).

10) 2017년에 완공된 드홀라-사디아 교량(Dhola-Sadiya, 아쌈-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연결)은 인도에서 가장 긴 다리로 기록됨.

- 한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이끄는 INC는 하위소득 20% 가구에 연 7만 2,000루피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시도했으나 지난 총선보다 8석 증가한 5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제2야당 격인 마하가트반단(Mahagathbandhan)<sup>11)</sup> 또한 총 15석을 얻는 한계를 보임.
  - INC는 자나타달(JD(S))과의 연정에도 불구하고 카르나타카(Karnataka)를 포함해 가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티(Amethi)'<sup>12)</sup> 지역구조차 BJP에 내어줌으로써 인도 내 정치적 영향력을 대폭 상실함.
  - 인도 하층 카스트를 대표하는 주요 정당이자 경쟁 관계이기도 한 BSP와 SP는 연정을 통해 BJP에 대항하고자 했으나, 주요 지지층의 다수가 BJP, INC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sup>13)</sup>
  - CPI, CPI(M) 등 좌파정당의 지지도가 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남인도 지역에서만 하원 의석을 확보함.

그림 3. 웨스트 벵갈 위치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5. 25).

표 2. 웨스트 벵갈 선거 결과

구분	2019 총선	2016 주선거	2014 총선	2009 총선	2004 총선
AITC	22	211	34	19	1
INC	2	44	4	6	6
CPI(M)	0	26	2	9	26
<b>BJP</b>	<b>18</b>	<b>3</b>	<b>2</b>	<b>2</b>	<b>0</b>
기타	0	10	0	6	9
합계	42	294	42	42	42

자료: Elections.in(검색일: 2019. 5. 31).

■ [BJP 압승요인] 이번 총선에서 BJP가 압승을 거둔 핵심요인은 '경제성장을 열망'하는 인도 유권자들의 선호와 이에 부응하는 모디 총리의 구체적인 경제성장정책 제시로 분석됨.

- 모디 총리가 임기 내 보여준 △도농지역 인프라 개선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국민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사상 최고의 실업률, 농민의 실망감 등을 봉합, '모디 웨이브(Modi wave)'로 귀결시킴.
  - 모디 정부는 클린 인디아(Clean India) 정책을 바탕으로 9,000만 개의 화장실을 보급하고, 우자왈라 제도(Ujjawala Yojana)를 통해 빈곤가정에 LPG가 보급되도록 하는 등 2억 5,000만 가정에 혜택을 제공, 인도 유권자들은 모디 총리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평가함.<sup>14)</sup>
  - 모디 총리는 2014년 10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Maan Ki Baat, Heart's Voice)을 진행하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대중과 공유했으며, 총선뿐만 아니라 BJP 주의회 선거 관련 집회 참여와 주요 정책 발표 등을 위해 인도 여러 주를 300번 이상 방문<sup>15)</sup>하는 등 국민에게 근면·청렴한 인상을 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임.
-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와 같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구축, 4차 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공약이 경제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의 표심을 확보함.

11) INC(UPA), BJP(NDA)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당 연합으로 하층 카스트(달리트, 기타 후진계급 등)를 기반으로 함. 바후잔사마즈와디당(BSP)과 사마즈와디당(SP)이 핵심 세력임.  
 12) INC는 1971년(1977~80년과 1998~99년 제외)부터 아메티 지역을 대표했으며, 라지브 간디, 소니아 간디를 이어 라훌간디가 집권하였음.  
 13) The Hindu(2019. 5. 26), "Post-poll survey: Why Uttar Pradesh's mahagathbandhan failed"(검색일: 2019. 5. 28).  
 14) India Today(2019. 5. 23), "Election results 2019: 5 reasons that got Narendra Modi another term"(검색일: 2019. 5. 29).  
 15) 모디 총리의 국내 순방은 같은 기간 싱 정부의 약 3배임. News18(2019. 3. 12), "92 Countries, 48 Foreign Visits, 328 Domestic Tours: A Look at PM Modi's Travel Calendar"(검색일: 2019. 5. 30).

-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도 국민의 평균연령은 26.7세이며, 블룸버그는 2027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 인력을 보유할 것으로 분석함.<sup>16)</sup>
- 2014년 총선을 통해 인도 사회는 더이상 카스트 및 종교 중심이 아닌 경제문제가 중요한 사회로의 변화를 보였으나, 이번 총선에서 INC는 공공 일자리 확대, 연금제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변화된 정책 선호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표 3 참고).
- 한편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래 '非힌두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면서 인도 내 '反BJP 정서'와 갈등에 대한 우려<sup>17)</sup>가 제기되고 있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종교·다민족 인도사회의 융합이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
- △케랄라(Kerala)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등 남인도는 북인도와 비교해 무슬림과 기독교, 드라비다인(Dravidian)<sup>18)</sup>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서 INC(UPA) 및 기타 정당이 대거 승리한 유일한 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표 3. 일자리 관련 정당별 주요 공약 내용

BJ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장려</li> <li>- 북동부지역 중소기업(Entrepreneurial Northeast) 지원</li> <li>- 22개 주요 분야(Champions Sectors: 방위, 제약 등)를 지정 및 고용 창출</li> <li>- 4차 산업을 바탕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li> <li>- 스타트업 지원: 500만 루피까지 무담보 대출 지원</li> <li>- 하층 카스트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탠드업 인디아(Stand up India) 시행</li> </ul>
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지원(Nyutam Aay Yojana): 소득 하위 20%의 가구에 연 72,000루피(약 118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은 5,000만 가구(약 2억 5,000만 명)로 예상</li> <li>- 연방정부 공식 40만 개를 2020년 3월까지 채용</li> <li>- 촌락 및 소도시 행정자치기구(gram panchayat) 일자리 100만 개 창출</li> <li>- 여성 고용 장려, 100인 이상 고용기업에 인센티브 지급</li> <li>- 산업·서비스·고용부(Ministry of Industry, Services and Employment) 창설</li> <li>- 스타트업 지원: 현재 벤처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천사세(Angel Tax)<sup>19)</sup>를 포함하여 신규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허가제 및 규제를 철폐, 대출 절차 간소화 등</li> </ul>

자료: 정당별 공약집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디노믹스 1기 정책을 지속 및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된 산업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되며, 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거시정책 ② 제조업 육성 및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4차 산업 대응,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③ 통관제도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 정책이 담긴 무역정책의 큰 방향이 예상된다.

16) Live Mint(2017. 9. 8), "India's burgeoning youth are the world's future"(검색일: 2019. 5. 20).

17) 2018년 6월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소를 도축했다는 의심만으로 한 무슬림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 10월 우타르프라데시의 지역 알라하바드(Allahabad) 지역명을 힌디 형태인 프라야그라즈(Prayagraj)로 변경하는 등 무슬림을 포함한 인도 내 소수종교를 향한 차별이 심화됨. BBC(2019. 5. 16), "India's Muslims fear for their future under Narendra Modi"(검색일: 2019. 5. 30).

18) 텔루구(Telugu), 타밀(Tamil), 칸나다(Kannada) 등 드라비다 언어를 쓰는 민족을 뜻함(2011 인도 인구 총조사 참고).

19) 스타트업이 시장의 평가를 넘는 투자를 받았을 경우, 그 잉여 투자금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함.

표 4. 모디 정부 경제정책의 내용 및 성과

1기 정부 경제정책	내용	성과	2기 정부 경제정책 공약
[거시정책] 재정적자 개선	① 재정적자 감축 ② GST 도입	- 재정적자 GDP 대비 3.7% 달성 - 간접세의 단일화 도입	- 재정적자 GDP 대비 3.0% - GST 개혁 지속
[산업정책] 제조업 육성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① 제조업 육성 ② FDI 자동 승인 ③ 기업환경 개선 ④ 스마트시티 ⑤ 산업회랑	- 제조업 비중(GDP 대비) 18%로 증가 - 90% 해외직접투자 자동승인 -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77위로 상승 - 99개 스마트시티 건설 선정 및 사업 진행	-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통한 국제경쟁력 개선(제조업 비중(GDP 대비) 25% 목표) - 기업환경 개선 노력 지속(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50위 목표) -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사업 (고속도로, 철도, 공항 확장) <sup>20)</sup> - 스타트업 사업 진행률 제고
[무역정책] 통관제도 개선 완전수입대체정책	① 통관제도 정비 ② 전자제품 완전수입 대체	- 평균 통관 기간 수출 2.5일, 수입 4일로 단축 - 16억 루피를 전자제품 기업 보조금으로 사용 <sup>21)</sup>	- 수입 통관절차 개선 (수입 수출 통관 2일 이내) - 완전수입대체제도 활용률 확대 (100억 루피 보조금 지급 예정)

자료: 저자 정리.

- [거시정책] GST 범위 확대 및 단순화 정책이 예상되고,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예측됨.
  - 모디 1기 정부는 GST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GDP 성장률 약 7.3%)과 낮은 물가(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4.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낮은 세율과 GST 개혁 지속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2017년 도입된 GST<sup>22)</sup>는 정권 후반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세수가 증대되어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13~14년 10.1%에서 2018~19년 12%로 증가됨
  - 모디 1기 정부 재정적자는 약 3.7%로 2009~14년의 5.4%에 비해 감소됨.<sup>23)</sup>
- [산업정책] 모디 2기 정부의 출범은 모디 1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제조업 육성정책 ‘메이크 인디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의미함.
  - 5년간 지속된 인도의 제조업 성장은 투자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2기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이를 위한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이 예측됨.
- [무역정책] 모디 정부 2기의 무역정책으로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의 연장이 예상됨.
  - 모디 정부는 전자제품 투자기업에 대해 수정특별인센티브<sup>24)</sup>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제품 완전수입대체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모디 정부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 절차 개혁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무역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 2기 정부 동안 약 60,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시스템 전자화 및 고속철도 구간 연장, 운영되는 공항의 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충을 계획함.

21) 2018년 4월 기준. Business Standard(2018. 6. 15). “Investment proposals under M-SIPS drop to Rs 914 bn in April as firms exit.”

22) GST(Good and Services Tax) 개혁을 통해 여러 항목별로 부과되었던 복잡한 간접세가 중앙정부, 주정부의 단일 간접세로 통합됨.

23) Bharatiya Janata Party(BJP) Sankalp Pantra 2019,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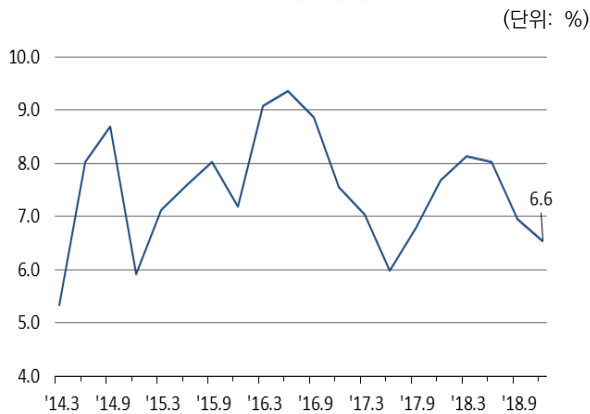
24) 수정특별인센티브(MSIP: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는 전자제품 완전수입대체를 목표로 전자제품 기업 투자자에게 20~25%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 가. 거시정책

■ 모디 2기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운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거시지표] 모디 정부 1기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7.3%로 추산되고, 소비자물가는 평균 4%를 유지함.
- 1기 정권 동안의 안정된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및 인도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물가의 하락에 기인함.
- 2018년 초 유가 상승,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 악화로 자본 순수출이 이어졌고, 루피화 가치 하락과 물가상승이 이어졌지만, 2018년 후반 안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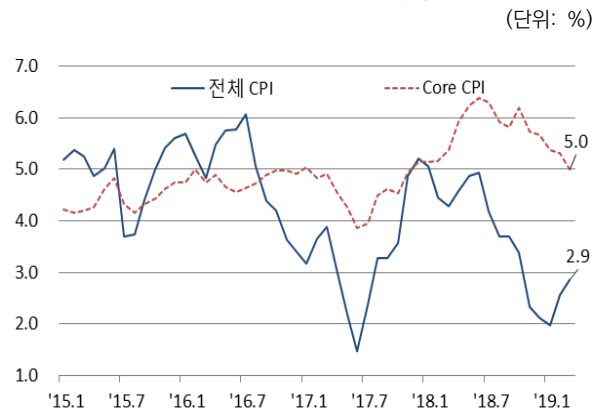
그림 4.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55 인용.

그림 5.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combined CPI 기준.

자료: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59 인용.

- [재정정책] 인도의 중장기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 대비 3%이고, 조세부담률<sup>25)</sup> 목표치는 GDP 대비 12.1%로,<sup>26)</sup> 이를 위한 세수 확대와 낮은 재정적자 유지를 위한 노력이 예측됨.
- 세수 확대를 위해 과거 GST 부과 제외품목이던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주류, 부동산 등이 간접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4단계로 구분된 세율은 향후 좀더 통합된 단일 세율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함.
- 모디 총리 1기 말, 충선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완화하면서 적극적 정부지출이 증가했지만, 중장기 재정적자 목표치를 고려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재정정책의 경기부담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중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보다 낮은 3%의 물가를 바탕으로, 인도중앙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5.75%를 유지 중임.
- 다만 향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확장적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존재함.

25)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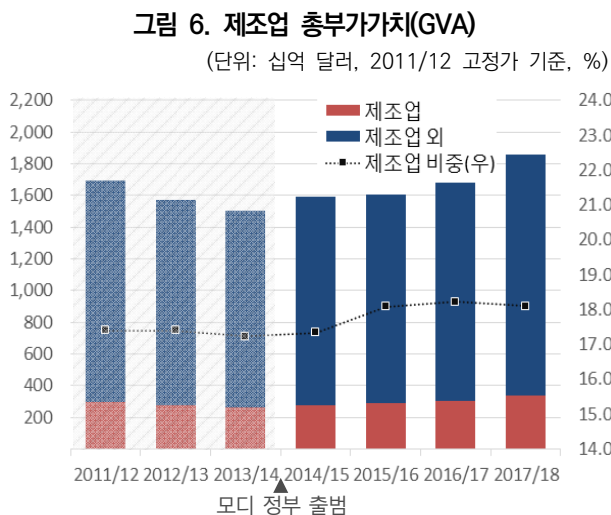
26) Ministry of Finance, Union Budget 2019-2020, Medium Term Fiscal Policy and Fiscal Policy Strategy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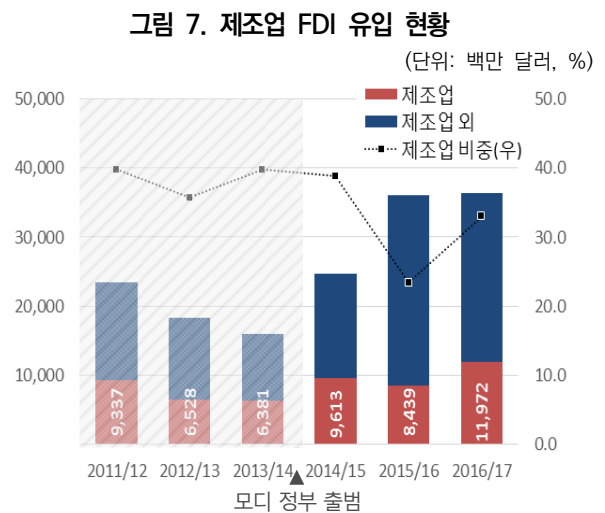
## 나. 산업정책

■ [지속가능 성장] 모디 2기 정부는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디지털경제화, 스마트시티 개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들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육성] 2기 모디 정부는 1기 집권 기간 다소 부진했던 제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기존 정책의 재정비와 구체화를 통한 효과 제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sup>27)</sup>
- 당초 1기 모디 정부는 2022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까지 확대, 제조업 분야 1억 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세운 바 있으나, 2017/18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18.1%에 불과하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주: GVA=GDP+보조금-세금.  
자료: 윤지현, 조총제(2018) 인용.



주: 2016/17 통계치는 잠정치.  
자료: 윤지현, 조총제(2018) 인용.

- 이에 2기 모디 정부는 기존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산업집적,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제조업 고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sup>28)</sup>
- 또한 1기 정부에서 제시한 제조업 육성 25개 분야 중 자동차(부품, 전기자동차 포함), 전기전자(ICT 포함), 제약, 재생에너지 등 생산 및 GVC 거점화, 고용창출, 디지털 경제화, 첨단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육성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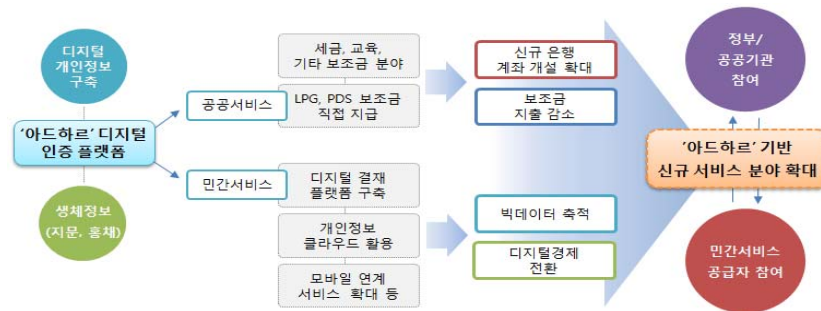
27) 모디 정부는 2019년 총선 공약에서 향후 5년 내 인도를 글로벌 제조기지로 만들고, 특히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힘(<https://www.bjp.org/en/manifesto2019>).

28) 인도는 주별로 제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토지비용 리베이트, 토지 매매·임대 인지세 면세, 전력요금 인센티브, 대출 양허 이자율, 투자 보조금 및 세금 인센티브, 낙후지역 보조금, 메가 프로젝트 대상 특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음(윤지현, 조총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17).

29) 모디 정부는 2019년 총선 공약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https://www.bjp.org/en/manifesto2019>).

- [디지털경제화] 모디 2기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아드하르’<sup>30)</sup>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90%를 상회하는 약 12억 명 이상의 인도국민이 ‘아드하르’에 가입했으며, 현재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민간기업의 정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진 상황임.<sup>31)</sup>
- 이에 2기 모디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아드하르’를 본격적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공유서비스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인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원활한 디지털 경제화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고속인터넷망(브로드밴드), 4G/5G, WIF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sup>32)</sup>

그림 8. ‘아드하르’ 기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현황 및 발전 단계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의 디지털인증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1 인용.

-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 전국적으로 의식확보 비율을 높인 모디 2기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현재 99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 개발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로, 관련 프로젝트는 총 5,151개 (사업규모 약 2조 루피)에 이르지만 실제 진행률은 33% 수준에 불과,<sup>33)</sup> 한편 산업회랑 개발 역시 대부분 초기 계획·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sup>34)</sup>
- 스마트시티 개발이 부진했던 이유로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프로젝트 설계와 주정부 및 중앙정부 간 불협화음이 지적되는 가운데,<sup>35)</sup> 보다 안정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 모디 2기 정부가 개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추진체제 재정비, 토지법 개정, 예산집행 가속화, 민간투자 유치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sup>36)</sup>

30) ‘아드하르’는 가입자에게 일종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개인의 생체정보, 즉 홍채·지문 정보와 연계시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도 최초의 디지털 생체인증 플랫폼임.

31) 현재 인도정부는 아드하르 정보를 금융거래, 보조금, 전자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임(조충제, 송영철(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의 디지털인증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3).

32) 모디 정부는 2019년 총선 공약에서 2022년 까지 인도 전역에 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농업관련 자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힘(<https://www.bjp.org/en/manifesto2019>).

33) 2018년 기준 완료되었거나 추진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는 1,675개, 사업비는 약 5,100억 루피 수준임. 한편 완료된 사업은 5,151건 (약 1,000루피)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10%에 불과함(Bsiness Today(2018. 12. 17). “PM’s Smart City Mission fails to pick up pace; 33% projects completed so far”).

34) 2008년 착수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사업만 최근 1단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음.

35) The New Indian Express(2019. 4. 16), “Five years on, Modi government’s Smart Cities project stuck in doldrums”; Bloomberg(2018. 3. 20), “Modi’s Flagship India Projects Starved for Cash, Report Says.”

- 이 밖에 모디 2기 정부가 총선 공약을 통해 밝힌 고속도로, 공항, 철도, 도시지하철, 에너지인프라, 수자원 관리, 타운십 등 인프라 개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인도 산업회랑 개발계획



자료: 윤지현, 조충제(2018) 인용.

그림 10.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 지역



자료: Maps of India(2019. 6. 3).

■ [경영·투자 환경 개선]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노동 및 토지법 개정, GST 안정화 등 경영·투자 환경 개선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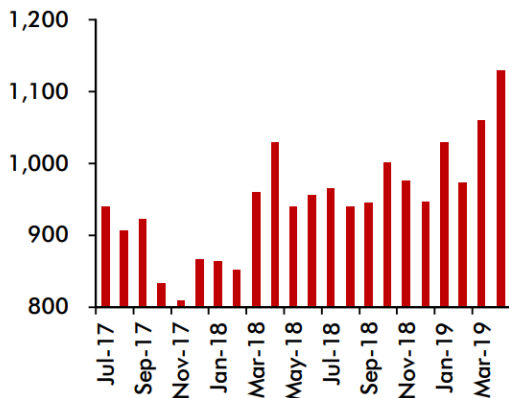
- [노동/토지법] 모디 1기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및 토지법 개정은 정치권, 노조, 농민들의 반발로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NDA가 향후 상원(Rajya Sabha)까지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혁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음.<sup>37)</sup>
  - 모디 1기 정부는 44개의 개별법으로 난립되어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을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 및 복지 △직업안전·건강·근로환경 등 네 개 부문으로 통합·단순화해 상정했으나, 야당 비중이 높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sup>38)</sup>
  - 토지법 역시 상원의 반대와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2018년 7월 이후 법안 상정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디 정부는 일부 인프라 산업에 대하여 사회영향조사 이행과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의무 면제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sup>39)</sup>
  - 2021~22년 기간 65개 상원 의석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이 중 NDA가 우타르프라데시, 아삼 주(州)에서 상당 의석을 확보해 전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sup>40)</sup>
- [GST 안정화] 모디 2기 정부는 전자송장(e-invoicing)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사 및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세 투명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고, GST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6) The New Indian Express(2019. 4. 14), "Five years on, Modi government's Smart Cities project stuck in doldrums"; Bloomberg(2018. 3. 20), "Modi's Flagship India Projects Starved for Cash, Report Says."  
 37) Asia Times(2019. 5. 28), "India's new government 'to push labor reforms.'"  
 38) 윤지현, 조충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9.  
 39) 구자라트와 텔랑가나에서는 국방, 농촌인프라, 주택, 산업회랑, 기타 인프라(PPP 프로젝트 포함) 등의 사업에 대해 사회영향조사 이행과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의무가 면제되며, 마하라슈트라에서는 PPP 프로젝트에 한하여 해당 의무가 면제됨(윤지현, 조충제(2018), p. 10 참고 및 인용).  
 40) The Economic Times(2019. 5. 27), "NDA likely to have majority in Rajya Sabha by 2021-22."

- 2017년 11월 GST 도입 이후 세제가 단순화되면서 세율 및 세수 확대, 물류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율적용 구간 단순화, 품목적용 범위 확대, 세금누수 방지대책 등이 필요함.<sup>41)</sup>
- 2019년 3월, 4월 GST 세입액이 각각 1억 루피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당초 인도정부가 정한 월별 목표치인 1.14조 루피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백만 명당 세수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11. 월별 GST 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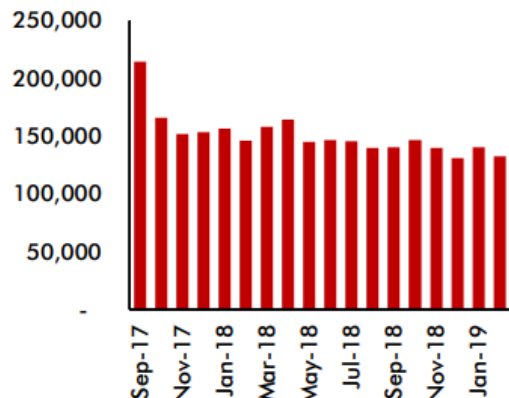
(단위: 십억 루피)



자료: AMBIT(2019) 재인용.

그림 12. 백만명 당 월별 GST 세수입

(단위: 백만 루피/백만 명)



자료: AMBIT(2019) 재인용.

## 다. 무역정책

■ 모디 정부의 무역정책 목표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품 강화를 통한 인도의 국제무역 참여도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전 세계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것임.

-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자국 제조업 상품의 수출 경쟁력 증대와 제조업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함.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 수출의 세계 비중은 약 1.5%로, 목표치인 3.5%의 절반 정도 달성함.
-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전반적인 무역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 증대와 더불어 남아시아 역내 수출이 다변화된 모습을 보임.
  - 2014년 정권 초기 7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량은 2018년 약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sup>42)</sup>
  - 모디 1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전통적 무역 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남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sup>43)</sup>

41) CNGC(2019. 5. 29), "Why GST collection and tax revenues pose a big challenge to Modi 2.0 government."

42) 모디 정권 초기 GST 도입은 인도 수출대금 유동문제로 인하여 수출 감소로 이어졌지만, 최근 GST 관련 개정(수출 시 GST 선급 지급 폐지, 전자지갑제도를 통한 수출업체 환불금 보장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 혼선이 줄어들어 무역규모 성장으로 이어짐.

43) 모디 정부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국으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16%, 8.8%, 5%를 각각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경우 각각 2.7%와 2.2%으로 8위와 10위를 기록함. 주요 수입 파트너는 중국과 미국으로 2018년 총 수입 중 약 14.6%와 6.3%를 차지함.

- 인도는 2000년 이후 아세안,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모디 정권 이후 새로운 FTA를 추진 중임.
- o 모디 총리 집권 기간 동안 뉴질랜드, 태국, 호주,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캐나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페루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 중이지만, 현재까지 새롭게 체결된 국가는 없음.

■ [무역환경 개선] 모디 정부의 수출확대 의지는 무역 인프라 개선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모디 정부는 통관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통관기술 도입을 통해 수출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 중임.
- o 모디 정부는 2020년까지 해운수입 통관의 경우 3일 이내로, 항공은 2일, 육지는 당일 통관을, 수출의 경우 1일이 감축된 해운 2일, 항공과 육지 운송은 당일로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함.<sup>44)</sup>
- o 2019년 기준 수출 통관은 2015년 대비 43.1시간 줄어든 66.2시간, 수입 통관은 190.7시간 줄어든 96.7시간으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목표치는 달성되지 않음.
- 수출·수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물류와 무역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전자화하는 정책을 진행 중임.
- o 19개의 항구와 17개의 항공 화물지에서 운영되었던 화물 24x7 통관시설을 모든 통관시설로 확장하려는 계획 중임.
- o 물류운송정책 전담부서가 인도 상무부에 설치되었고, 수출·수입 업자의 질의사항과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국제 무역 관련 문의 창구 'Contact@DGFT'를 창설함.<sup>45)</sup>

■ [수입대체정책] 모디 정부는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며, 강화된 비관세 장벽과 수입대체정책 등을 통한 내수시장 보호 움직임이 예상됨.

- 모디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 의지가 강하며,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인해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에 소극적임.
- o 인도의 2009~13년 평균 무역적자는 약 120억 달러, 2014~18년은 약 110억 달러로 무역적자가 지속됨.
- o 모디 정권의 제조업 제품 수입 관세는 평균적으로 약 10%이고 농산품의 경우 약 30%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수입 관세가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정체됨.
- 인도 제조업 부분의 전반적인 수입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생산을 유도하고 있음.
- o 전 세계 대상 자동차(HS8703)의 수입관세는 2015년 60%에서 2017년 125%로 증가하였고, 철강(HS 72)은 같은 기간 7.52%에서 9.34%로 높아지는 등 육성 제조업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는 추세임.<sup>46)</sup>
- o 인도의 수입대체정책과 높은 수입 장벽에 대한 대응으로 현대-기아 자동차, 가전회사 파나소닉, 하이얼, 볼타스, 스마트폰 제조사 폭스콘, 샤오미 등의 신규 및 생산 증설 투자가 이어짐.

44)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2017), "National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2017-2020."

45) *The Hindu*(2018. 1. 10), "Govt launches online facility to resolve foreign trade issues."

46) MFN 기준(WITS 기반 저자 계산).

- 또한 모디 정부는 위생 및 검역, 반덤핑, 무역상 기술장벽,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음.
- 2009~13년 기간 대비 2014~18년 기간 위생 및 검역 제소 건수는 약 6.5배, 무역상 기술장벽은 약 3.3배, 반덤핑 약 2.6배 증가함.
- 모디 정부의 이러한 무역 정책은 2020년까지 완전 수입대체를 목표로, 해외 자본을 이용한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해 제조업 분야 국내 부가가치 제고와 국내 일자리보호정책 목표에 기인하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2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육성정책은 해외 자본의 용이한 제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제조기업의 인도 내 생산기지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상승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국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함.
-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이후 총상품 수출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14년 63%에서 2017년 70%로 약 10%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14년 3천억 달러에서 2017년 4천억 달러로 증가함.
- 하지만 2018년 기준 전체 일자리 대비 제조업의 고용은 전체 대비 2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 수입 개방 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 시 수입제한 조치 등을 활용하여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

표 5. 인도 비관세 장벽 추이(1999~2018)

(단위: 건)

기간	SPS	TBT	ADP	CV	SG	QR
1999~2003	4	13	21	0	0	0
2004~08	43	35	58	0	0	0
2009~13	22	12	66	0	0	59
2014~18	145	40	174	12	2	0

주: 제소 건수 기준. SPS(위생 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TBT(무역상 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DP(반덤핑, Anti dumping), CV(상계관세, Countervailing), SG(세이프 가드, Safe guards), QR(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자료: WTO I-TPS.

### 3. 한·인도 협력 시사점

- 모디 2기 정부 출범은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 협력의 고도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함.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2019년 2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인도 간 협력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지난 2월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인도의 롤 모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음.
- 모디 2기 정부는 전국적인 영향력 확보를 바탕으로 지난 1기의 주요 과제였던 토지법, 노동법 개선 등 각종 정책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sup>47)</sup>

-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인도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디 2기 정부의 제조업 및 디지털 경제 육성정책을 통하여 한국과의 발전된 산업 협력이 예상된다.

■ [산업협력 강화] 모디 2기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과 함께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면서 양국 상생발전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할 필요

- [협의 채널 활용] 이번 총선을 통해 모디 2기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신남방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된 만큼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민관 협의 채널의 조속한 설치·활용을 통해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2019년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음.
- 더불어 정부와 민간 협력체 간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인도 협력센터’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양국간 협력 이슈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sup>48)</sup>

-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 진전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양국의 인적·과학 기술 교류의 확대가 요구됨.

- 2018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K-ICT 부트캠프’가 방갈로르에 설치되었으며,<sup>49)</sup> 2019년 2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에는 양국이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는 데 합의함.
- 최근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 진전과 기술발전을 고려해볼 때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산업로봇, 전자보건/의료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개별 세부협력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sup>50)</sup>
- 모디 2기 정부는 2019년 총선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을 둔 ‘신산업정책’ 발표 계획을 밝힘.

-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 모디 2기 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인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2018년 7월 인도 뭄바이에 사무소를 개소한 LH는 인도의 건설시장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면서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진입을 모색하고 있음.<sup>51)</sup>
-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의 산업고도화와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제조업 클러스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개발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 한·인도 교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도 꾸준히 성장 중으로, 예상되는 모디 2기 무역 정책에 대응되는 정책 지원이 요구됨.

47) Business Standard(2019. 5. 31), “Standard Land, labour, privatisation : Big bang reforms soon, says NITI Aayoug VC”(검색일: 2019. 5. 30).

48) 윤지현, 조총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16 인용.

49) 업무 및 주거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 비즈니스 및 문화 교육, 인도 IT 시장 정보 제공, 인도 내 협력기업 및 투자자 연계, 법인 설립 지원 및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소 등록지 등을 제공함(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5. 3), 「13억 ‘아시아코끼리’ 인도시장, IT 한국거점 마련」, 보도자료 인용).

50) 코트라(2018. 8. 4), 「디지털 인디아와 연계되는 인도의 4차 산업혁명 현황」 참고.

51) LH는 마하라슈트라주 깔리안-돔비블리 및 반드라 스마트시티 등 3개 사업에 대해 인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모디 정부의 수출장려정책은 한·인도 교역 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인도는 한국의 성장하는 교역 상대국으로 발전함.
  - 한국 전체 교역량 중 대(對)인도 비중은 2014년 1.64%에서 2017년 1.9%로 증가하였고(180억 → 200억 달러),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2.6%로 증가(120억 → 150억 달러), 수입 비중은 1%로 유지 중임(50억 달러).
  - 모디 정부 1기에서 한국은 인도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 중이며, 인도의 총 교역량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14년 2.3%에서 2017년 2.8%로 증가하였고, 수입 비중은 2.9%에서 3.6%로 성장함.
  -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교역 증가요인 중 하나는 CEPA를 통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낮아진 실효관세율에 있음(2015~18년 실효관세율: 전기기기(HS85) 6.8 → 2.3%, 기계류(HS84) 7 → 1.6%, 철강(HS72) 7.9 → 0.7%)
- 하지만 모디 정부 집권 이후 인도의 對한국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상설 등의 구체적 정책방안이 요구됨.
  - 현재까지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는 총 24개이며, 이 중 15개(62%)가 모디 총리 재임 중 제기되었으며, 철강, 화학, 정밀기계, 섬유, 플라스틱이 규제 대상임.
  -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8년 9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상무부와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통해 관련 업계의 우려와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였고, 인도의 높아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의 해결을 위하여 무역구제 협력회의의 상설화가 요구됨.
- 추가적으로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의 진전된 개정 협상을 통하여 양허율 확대가 필요함.
  -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은 2010년 발효되었고,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임.
  - 한·인도 자유무역협정 양허율은 85.5%로 일·인도 양허율인 90%, 콜롬비아 99.4%, 베트남 89.2%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sup>52)</sup> 인도의 FTA 체결 국가는 타 개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철강, 화학 등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에서의 양허율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이 요구됨.

■ 모디 2기 정권의 제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예상되므로 인도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

-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은 여러 제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 진출 중이지만, 한국은 자동차, 금속, 철강 등 일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진출 분야의 다양화가 요구됨.<sup>53)</sup>
  - 인도의 제조업 육성산업은 디지털 경제화와 4차 산업 혁명에 대응되는 통신, 신재생에너지, 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 모디 정부는 인도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고, 일부 상품의 경우 인도의 수입대체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진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시점임.
- 제도와 문화 차이로 인하여 인도 투자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인도 투자 준비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및 진출 산업에 대한 심화 정보 제공이 중요함. **KIEP**

52) 조충제(2018), 「신남방 시대의 한·인도 CEPA」,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 1, No. 1.

53) 한형민, 김정곤, 송영철, 윤지현(2019), 「글로벌 대(對)인도 투자 증가요인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